

제 3 0 5 회 임 시 회
기 획 경 제 위 원 회
'22.2.10.(목)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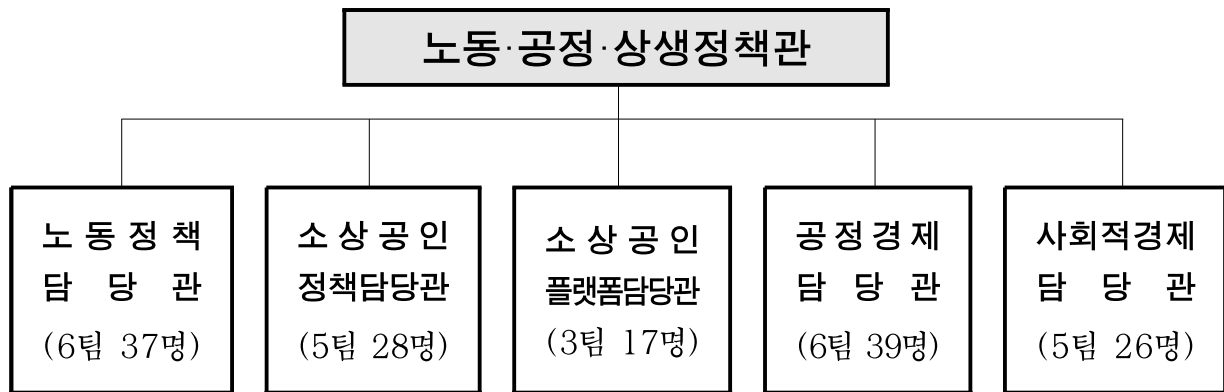
업 무 보 고

2022. 2.

노 동 · 공 정 · 상 생 정 책 관

I . 일반현황

조 직 - 1정책관 5담당관 25팀 (1출연기관)



○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4지역본부 25지점 8센터, 471명)

인 력 - 정원 147명 / 현원 141명

(`22. 1. 25.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일 반 직 (정 원 / 현 원)						임기제	관리 운영
				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계	147	141	△6	119/111	1/1	5/5	27/26	40/36	46/43	24/24	2/3
노동 정책 담당관	37	35	△2	25/24	1/1	1/1	6/5	9/7	8/10	11/10	1/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8	32	4	26/30	-	1/1	6/5	8/10	11/14	2/2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17	17	-	16/16	-	1/1	3/4	5/5	7/6	1/1	-
공정경제 담당관	39	37	△2	29/26	-	1/1	6/6	10/8	12/11	9/9	1/2
사회적경제 담당관	26	20	△6	24/19	-	1/-	6/6	8/8	9/5	2/1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노 동 정 책 담 당 관	○ 노동정책 수립·추진, 비정규직 처우개선, 생활임금제 추진 ○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지원,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 노동자 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관리 운영 ○ 플랫폼·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대책 추진 ○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종합대책 수립)
소 상 공 인 정 책 담 당 관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밤도깨비야시장 등 소상공인 판로지원 ○ 전통시장 경영·시설 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소 상 공 인 플 랫 폼 담 당 관	○ 핀테크 기반 소상공인 온라인 전환 사업 ○ 소상공인간편결제 플랫폼 활용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 ○ 소상공인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 및 소비자 마케팅 ○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
공 정 경 제 담 당 관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대부업체 지도감독 등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 ○ 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사 회 적 경 제 담 당 관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 ○ 사회투자기금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예 산

(’22. 1. 25.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A)	2021 최종예산(B)	증감 (A-B)
총 계		362,240	467,512	△105,272
사업 예산	소 계	266,824	414,677	△147,853
	일반회계 계	256,802	401,537	△144,735
	노동자 복지 증진	22,832	20,932	1,900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2,096	2,574	△478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95,360	190,277	△94,917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6,264	46,478	△10,214
	소상공인 간편결제의 안착 및 활성화	660	3,559	△2,899
	지역상권 활력 강화	68,115	97,501	△29,386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2,084	2,305	△221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1,714	2,033	△319
	소비자 권익 보호	2,591	2,512	79
	사회적경제 시민체감 및 인식제고	2,287	3,803	△1,516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22,799	29,563	△6,764
	도시개발특별회계 계	10,022	13,140	△3,118
	노동자 복지 증진	7,570	8,175	△605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2,452	4,965	△2,513
일반 예산	소 계	95,418	52,835	42,583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94,976	52,377	42,599
	기본경비	442	458	△16

Ⅱ. 비전 및 목표



Ⅲ. 2022년도 업무보고

①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 ① 현장중심 예방체계 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총력 대응
- ② 플랫폼·특고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③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안전·건강권 보호
- ④ 폭넓은 노동권익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인프라 확대·강화

② 코로나19 생존위기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한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 ②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소상공인 생존위기 극복 지원
- ③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 ④ 창업·성장·재기 선순환을 통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 ⑤ 상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육성

③ 디지털 전환시대 소상공인 대응력 및 경쟁력 강화

- ① 서울페이+ 구축으로 소상공인 매출 및 시민편의 확대
- ②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온라인 입점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회복

④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 ① 체계적 예술인 권익보호 등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
- ②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으로 임차상인 영업기반 안정화
- ③ 신유형 소비자 피해 해결 및 민생침해 취약분야 집중점검
- ④ 공정거래종합지원 체계 강화로 소상공인 피해근절

⑤ 상생기업 경쟁력 강화와 가치소비 확산으로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

- ① 사회적 경제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② 혁신기업 가치성장 및 투자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1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 ① 현장중심 예방체계 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총력 대응
- ② 플랫폼·특고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③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안전·건강권 보호
- ④ 폭넓은 노동권익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인프라 확대·강화

①

현장중심 예방체계 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총력 대응

노동정책담당관

□ 시 전체 40개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공유하고
법 시행 전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완료
 - － (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전문인력 배치, 위원회 구성 등
 - － (조직·예산) 전담팀 지정, 전담인력 28명 증원, 전년대비 예산 19.4% 증액(2,740억원)
 - － (위험 파악)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요인 감소대책 마련
 - － (교육 실시)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산재예방 교육 실시

□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강화



- **(계획)** 40개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 및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 40개 사업장별 계획 수립(1월중) 총괄부서에서 계획수립여부 및 적정성 점검
- **(실행)**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로 사업장의 실질적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감소
 - － '21년 : 전문기관 위탁 실시 ⇒ '22년 : 사업장 자체평가 실시 (필요시 위탁 병행)
- **(점검)** 사업장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보고, 총괄부서 및 전문기관 컨설팅
 - － 체크리스트 활용, 계획대비 추진실적, 산재관리현황, 관리자 등의 업무수행평가
- **(개선)** 자체평가 결과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반영

□ 안전조치 이행 점검과 쏘 종사자교육 등 현장중심 예방체계 확행

- (위험제거)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노후시설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점검, 도급시 안전조치 이행 확인 및 관리감독 철저

- (안전교육) 전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안전보건에 대한 역량 강화

관리책임자 시장, 기관장 등 관리책임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간 6시간 이수)

관 리 자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연중) 및 이행점검(반기1회)

현 장 교 육 관리감독자에 의한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로 “先 안전 後 작업” 생활화

· 위험작업 종류별 중대재해예방 교육자료(OPL) 제작하여 현장 교육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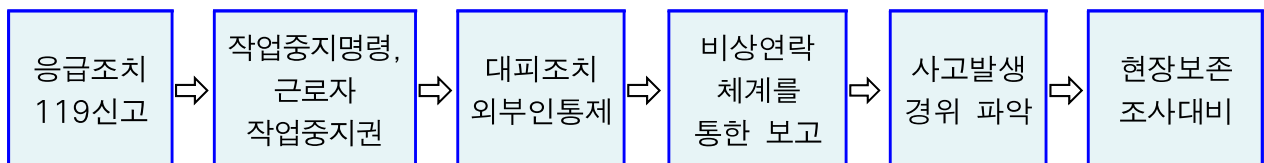
- (비상훈련) 사업장 모든 종사자가 참여한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리스크 평가 → 상황 및 대응 시나리오 반영

□ 중대재해 대응 절차 마련 및 비상조치 체계 관리로 리스크 최소화

-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절차 및 공통 대응절차(매뉴얼)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절차〉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마련하여 현장 전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사업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사업소장)	총괄부서 (노동정책담당관)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즉시 보고 (유선 등)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재발방지 계획 수립 · 시행, 종사자 교육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 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 교육이행여부 확인 -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②

플랫폼·특고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정책담당관

□ 급증하는 초단기 노동자 '긱(Gig)워커' 지원방안 마련

신규

❖ 긱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기반 긱(Gig)경제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동형태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계약 후 일회성으로 일을 하는 '초단기 노동자'

- **휴이동노동자센터를 긱워커에게 공유**하여 사무공간 임대비용 부담 완화
 - (내용) 야간에만 쉼터로 사용되던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를 주간에 디자이너, 번역가, 온라인 강사 등의 사무(작업, 미팅) 공간으로 제공
 - (운영) '22년 3월 합정 쉼터 시범 실시 → 하반기 서초 쉼터로 확대

구분	 주 간 (9시~20시)	 야 간 (20시~익일6시)
이용대상	· 디자이너, 번역가, 온라인 강사 등	·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등
용도	· 작업 및 클라이언트 미팅 장소	· 휴식 및 대기 장소
추가 서비스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보호 교육 · 세무/재무교육 실시	· 노동법 교육 및 특강 · 의료/금융/노무/주거/취업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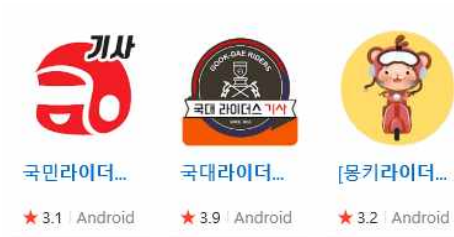
- **찾아가는 무빙쉼터 운영**으로 이동노동자 편의 제공
 - (내용) 푸드트럭, 미니버스 등 활용 배달 밀집 지역 배달라이더 무빙쉼터 운영
 - 푸드트럭 지원 : 일 40만원 정액 지급
 - (장소) 대학가, 오피스텔·원룸촌, 스타트업 밀집 지역 등 5곳
 - (시간) 장소별 주 2회/일 4시간(평일 18시~22시/주말 12시~14시/18시~20시)
 - (예산) 140백만원 (금년도 시범 운영 및 성과분석 후 확대 추진 검토)
- **세금신고 방법·절세팁 알려주는 1:1대 무료 세무상담** 실시
 - (내용)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세무사의 1대 1 밀착상담
 - 세금신고 대상여부, 필요서류, 신고 및 납부 요령, 절세방법 등 상담
 - (운영)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상담 ※ '21년 실적 : 총 763건

□ **주요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으로 불공정계약 방지

- 종사자 규모,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대상) '21년 간병인 → '22년 방문교사 등 2개 직종 선정
 - (예산) '22년도 100백만원 (50백만원×2개 직종)

☐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강화

- 정책 수혜자인 ‘배달라이더’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해 보험신청률 제고
 - － **구직사이트** 및 **라이더 커뮤니티**를 통한 보험 소개 및 신청방법 등 안내(1월~)
 - (커뮤니티)네이버 배달세상(회원 14만3천명), 정보공유 모두의 라이더 등
 - (라이더 구직앱) 알바천국, 사람인 등 (이륜차공유앱) 오늘은 라이더 등
 - － 라이더용 배달접수앱 내 콜센터(보험금 접수) 상시 노출로 사고시 빠른 대응 지원
 - 국민라이더스, 국대라이더스, 오늘의 픽업라이더스 등

		
네이버카페 ‘배달세상’	라이더 기사용 앱	앱 화면

❖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16세 이상 플랫폼 배달라이더
- － 보장내용 : 배송업무 교통사고 상해에 대해 보장(타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 상해사망 2천만, 후유장애 최대 2천만, 골절진단 2십만, 수술 3십만,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등 최대 2백만
- － 소요예산 : 25억원 (’21.12.13. ~ ’22.12.12. 1년간)
- － 접수현황 : ’22.2.3일 현재 **19건 접수(사망 2건), 4,560만원 지급 예상**
 -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신청 가능

☐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및 사기피해 예방 홍보를 통한 권리보호 신규

○ 영세 택배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으로 택배노동자 건강권 보호

- － (대상) 서울 소재 종사자 30인 미만 영세 택배사업장 5개소 내외(’22년)
 - ※ 서울 택배사업장 총 161개소 중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50개소 (’21. 한국통합물류협회)
- － (내용) 도배·바닥 및 휴게시설 개보수,
 - 에어컨 및 정수기 등 비품구매 등
- － (규모) 사업장 당 5백만원 ~ 1천만원
- － (예산) ’22년도 30백만원



〈개선 전〉



〈개선 후〉

○ 입직시 취업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배포

- － (내용) 택배업에 대한 실질적 정보(취업사기 예방팁, 취업방법, 근무형태 등)가 담긴 영상 콘텐츠 제작, 유튜브 게시 및 택배사/협회 등 홍보
- － (예산) ’22년도 15백만원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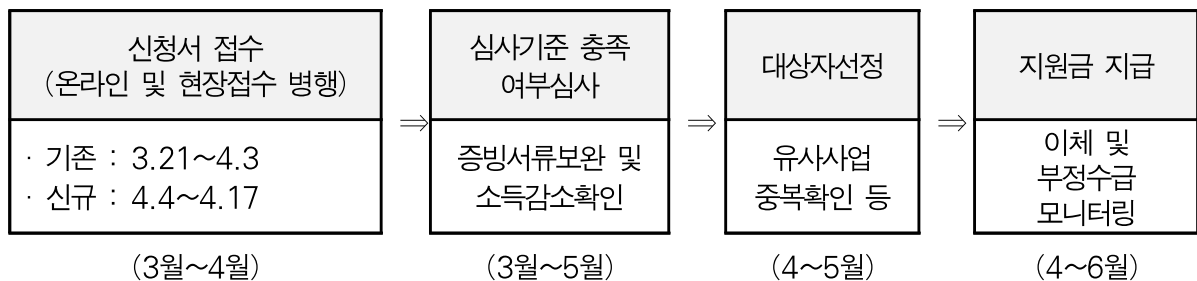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안전·건강권 보호

노동정책담당관

□ 25만 취약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신규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총 25만명
 - (기존 약 21만명)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 기수급자
 - (신규 약 4만명)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급요건 충족자
- (지원내용) 1인 50만원(1회) 지급
 - ※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2
- (소요예산) 총 128,000백만원 (지원금 1,250억원, 행정비용 30억원)
- (지급방식) (기존) 심사 후 수시지급, (신규) 심사 후 일괄지급
- (추진일정) 3월 말 신청개시 → 4월 ~ 6월 중 지급 완료



- (신청방법) 온라인 및 현장접수 병행을 통한 신청자 편의성 증진
 -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접수 일정 분리(기존수급자 우선지급)
 -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접수 2주, 현장접수는 3일로 최소화 운영

□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전담 신고창구 운영 및 노무·심리 상담

- (노무상담)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피해 등 노무 상담
- (심리상담) 정신적 피해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 (추진방법)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전담창구 운영

※ '21년 실적: 상담 428건, 권리구제 지원 12건(진행중3, 종료 9)



□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권리보호 실효성 제고**

- (체계구축) 감정노동 정책 지원 및 공공부문 보호체계 구축·이행
 - － 감정노동 실태조사 및 공공부문 이행점검, 기관별 매뉴얼 자문 실시
- (심리치유) 감정노동 종사자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 － 사각지대 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 8개 권역별 거점센터 제휴 상담지원
 - － 취약 종사자 감정노동 피해 예방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진행
- (인식개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웹포스터, 영상)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중심 구제 방안 확립** 강 화

- 전담인력 배치로 처리기간 단축(90일→ 30일) → 비밀누설·2차가해 방지
 - － (현황) 신고 창구 이원화(인권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조사관 3명이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 조사로 처리기간 단축 어려움
 - － (개선) 노동정책담당관 내 전담 조사관(2명) 및 조사위원회 신설, 신고창구 단일화

구 분	현 재		개 선
처리기간	90일	⇒	30일
조사인력	인권담당관 내 시민인권보호관 3명	⇒	노동정책담당관 내 조사인력 2명
위 원 회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직장 내 괴롭힘 전담조사위원회’ 신설

※ 위원회 설치 근거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괴롭힘 가해자 처벌 강화 및 2차 가해 발생 방지 방안 마련
 - － 피해자 - 가해자 즉각 분리 조치 (피해자 의견 및 요청 우선 반영)
 - － 가해자 즉각 인사이동, 징계, 승진 제한 등 가해 정도에 따른 처벌 조치
 - － 2차 가해 범위 및 피해자 불이익 정의 등 포함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정

□ **민간 노동자·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 지원** 신규

- 피해 발생 소규모 사업장 대상 괴롭힘 조사 전문인력 지원('22. 10개소)
 - － 지원대상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민간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 | | | | | | | | | | | |
|-----|---------|---|-----|-----|---|-----|------|---|-----|------|
| '22 | 10개(시범) | ⇒ | '23 | 50개 | ⇒ | '24 | 100개 | ⇒ | '25 | 200개 |
|-----|---------|---|-----|-----|---|-----|------|---|-----|------|
- － 지원인력 :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노무사 1인 (사업장당 평균 3회 방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조직문화 컨설팅」 무료 지원

④

폭넓은 노동권의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인프라 확대·강화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으로 안전한 노동문화 조성 강화

- (내용) 서울 소재 30인 미만 기업* 대상 우수기업 인증 시 자금·경영 지원
 - *서울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97% (78만개소)
 - － 자금 : 산재예방 교육, 휴게실 등 시설개선, 안전장비 구입 등(1,000만원 내외)
 - － 경영 : 마을노무사 상담,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및 상담, 노동법 교육 등
- (현황)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버스·지하철 광고, 우편·유선 홍보 및 방문(21.5 ~ 6월 3,635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나 신청률 저조
 - － 신청기업 공개모집 2회 연장(21.4.~6.)으로 5개소 신청, 3개소 인증
- (개선) 사전컨설팅, 서류 간소화, 홍보 강화, 상시 공모접수를 통한 사업 활성화

구 분	기 준	개 선
사 전 컨 설 팅	❖ 컨설팅 없이 바로 심사를 진행	❖ 사업장에 맞는 개선방안 안내 등 사전 컨설팅 진행 후 인증 평가 추진
서 류 간 소 화	❖ 7종 (기본3종, 산업재해율 확인서, 위험성 평가 인증서 등)	❖ 기본 3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홍 보 강 화	❖ 협력체계 등을 활용한 현장 방문 등 ❖ 지하철, 버스 광고 ❖ 유관 협회 등 협조 요청	❖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홍보 실시 (기간제, 뉴딜일자리 등 활용) ❖ 관련 업체 DM 발송 등 적극 홍보
신 청 간	❖ 정기 공모 실시(2회)	❖ 상시 공모·접수체계로 변경 ※ 관련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소요예산) 250백만원

□ 市 발주 건설현장, 용역·민간위탁 업체 대상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강화

- (대상) 市 발주 건설 현장, 공공조달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 100개소
- (내용)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사항 준수실태 점검 및 컨설팅
 - － 점검내용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 (개선) 일방적인 노무점검에서 자율개선 형식의 사업방식으로 전환
 - － 사업장 방문 前 업체에 컨설팅 취지 및 내용, 협조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
 - － 컨설팅 전 업체에 자체 점검표 및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제공
- (소요예산) 20백만원 ※ '21년 실적: 98개소 실시(44개소 지적, 42개소 개선 등)

□ 차질 없는 노동자 복지관 이전·확대로 노동복지 강화

-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22년 4월 이전
 - '21.12월 공정률 87%, '22년 3월 준공예정

※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

- ❖ 이전부지/규모 : 마포구 아현동 / 2,773㎡(지하 1층, 지상 5층)
- ❖ 기 간 : '19. 1월 ~ '22. 3월 ❖ 총사업비 : 78억원



<강북노동자복지관>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행복주택 복합 건립)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 철저
 - '22년 실무협의 통해 입주시설 가능공간 확정, 실시설계 추진하여 '22. 11. 공사예정
- ※ 실시설계(~'22.9월), 착공('22.11월), 준공('24.12월), 이전('25. 1월~)

소관부서	2021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노동정책 담당관	입주시설 기능 및 공간 관련 협의	실무협의 (~2월)	노동체험관 전시컨셉트 및 운영방안 결정 (3월 ~ 12월)		
공공주택과 SH공사	행복주택 선정 심의 중앙투자심사		실시설계 (2월~9월)	공사발주 (9월~10월)	공사시행 (11월~)

- ❖ 이전부지 : 구로구 구로동 98-5(舊영등포 수도사업소) ❖ 기간 : '20. 1월 ~ '24. 12월
- ❖ 규모 : 연면적 21,500㎡(지하 4층, 지상 19층) ❖ 총사업비 : 798억원
- * (1~7층) 노동자복지관 : 노동체험관, 노동법률지원센터 등 / (8~19층) 행복주택 170호

□ 노동자복지관을 일반노동자를 위한 공간으로 개편·기능강화

강 화

-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확충
 - (강북노동자복지관) 건물 이전('22.4월) 이후 노동법 강좌·생활체육교실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인근 주민 및 조합원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위한 퇴직 예정 노동자 재취업아카데미 운영
- 노동단체 사무실 공간을 축소하여 취약노동자 위한 공간 확보
 - 노동단체 사무실 공간을 축소, 취약노동자 및 일반시민 대상 복지공간 마련

2

코로나19 생존위기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한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 ②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소상공인 생존위기 극복 지원
- ③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 ④ 창업·성장·재기 선순환을 통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 ⑤ 상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육성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한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총 2조 2,500억원**의 중단 없는 정책자금 투입 및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지원

안심금융	포용금융	혁신·성장 금융
4무 안심금융 1조원 경영활성화 8,700억원	포용금융 1,150억원 ESG금융 950억원	혁신자금 200억원 일자리창출 1,500억원

- **(안심금융)**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無 안심금융」 등 지속 지원
 — 4무 안심금융 1조원 공급으로 금리부담 완화지원 (5만명)

- 무보증료, 무이자(1년), 2~5차년도 이차보전 0.8%
- (일 반) 1~7등급 9천억원, (중저신용) 4~9등급 1천억원

※ '21년 실적 : 총 2조3천억원 공급, 88,969건 지원(용자추천 기준)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제활성화 자금 8,700억원
- **(포용금융)** 금융 취약계층 대상 희망사다리 금융지원 확대
 — 6등급 이하 고금리 대출자 금융부담 완화 지원 1,000억원
 — 성실 실패자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재기지원 자금 150억원
- **(혁신·성장금융)**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및 창업기업 지속 지원
 — 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강화 1,500억원
 — 기술 및 지식기반 기업 대상 기술형 기업 도약자금 200억원
- **(ESG금융)** 사회적 가치실현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시행
 — (지원대상) 친환경(E), 사회적경제(S), 지역사회공헌기업(G) 등

- 여성고용우수기업 및 마이크로크레딧(50억원)
- 사회보험가입 촉진(200억원)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100억원)
- 긴급 자영업(500억원)
- 재해중소기업(100억원)

②

서울 임차소상공인 자립자금으로 소상공인 생존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 추진배경 : 정부 손실보상 대상 및 제외대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우선 고려
 - '21.3분기, 3개월 손실보상이 10만원에 불과한 업체가 15% 수준으로 미흡한 보상 현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받은 소상공인이 덜 받게 되는 역차별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나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 ❖ 현 황 : 소상공인 약 70만 개, 이 중 임차사업장 비율은 91.5%

숙박·음식 등 9개 업종 '19~'20년 비교시 매출액 모두 감소 *국세통계포털

 - 서울지역 소상공인 평균매출액 1.8억원 <'19년 사업체 조사 자료 분석(신용보증재단)>
- ❖ 소상공인이 사업 시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 소상공인 69.9%가 '임대료'를 가장 큰 부담
(소상공인연합회, '21.2월)
 - 경영애로 중 '임차료' 부담 17.5%
(중소벤처기업부, '21.12월)

코로나 재확산 후 부담되는 경영 비용
(단위: %)

☐ 임차 사업장 50만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원

신규

-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사업장 100만원(개소당) 지급
- (추진일정) '22.2.7 신청개시, 3월 중 지급완료 추진
- (추진절차) 접수 → 심사 → 지급까지 10일 이내 신속 처리
- (지원규모) 총 5,000억원

☐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체계로 원활한 자금지원 준비 철저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시스템 구축, 온라인 접수 및 지원자격 심사
 - 기간제 인력(금융기관 퇴직 시니어 및 청년) 120명 활용 신속 심사 추진
- (국세청 · 카드사) 신청자 매출액 등 정보 확인
 - 국세청 매출 자료 협조 및 주요 카드 3사(신한, 국민, BC)와 업무협약 추진
- (자치구) 현장 접수처 운영, 대상자에 지원금 지급

☐ 온라인 중심 처리로 신속한 지급과 소상공인 방문 최소화

- 온라인 신청 : '22.2.7~3.6 (행정정보 활용, 신청서류 최소화)
- 현장접수 : '22.2.28~ 3.4(1주 운영, 온라인신청 어려운 경우)

③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제활력 회복

☐ 잠재력 높은 골목상권을 로컬브랜드 촉진지구로 특화·육성

신규

(1단계, '22년) 인프라 구축	(2단계, '23년) 로컬브랜드화	(3단계, '24년) 자생력 강화
▶ 브랜드 발굴, 네트워크 구축 ▶ 상권활성화 추진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 로컬브랜드 구축 ▶ 상생협약 체결	▶ 로컬브랜드 강화 ▶ 성과 평가, 보완

- (상권 환경조성) 노후시설 개선, 브랜드 스토리 개발, 스타가게 육성, 상인역량 강화 등 (5개소, '22.4월~)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골목 상권별 특성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촉진지구 내 지역환경, 문화자산 기반의 창업가 선발·육성
 - 교육 기간('22.7월~12월, 6개월 과정), 소요예산 200백만원

상권 선정	상권별 교육과정	로컬크리에이터 선발	인큐베이팅
▶ 지역자원 분석 ▶ 브랜딩, 사업 전략	▶ 예비창업자 모집 ▶ 맞춤형코칭 및 멘토링	▶ 사업계획 평가 ▶ 성과공유회 개최	▶ 로컬브랜드 상권 창업 ▶ 창업 거점공간 제공

- (소요예산) '22년 2,856백만원 (상권별 5 ~ 6억원 이내)

☐ 인지도 있는 상권의 특색 강화 통해 로컬브랜드 강화지구로 고도화

신규

- 상권별 최적화 콘셉트를 반영하여 상권 내 핫플레이스 등 상권 명소 개발
 - 강화상권 대상 실태조사를 통한 후보지 발굴 추진
 -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권내 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지원
- (소요예산) '22년 100백만원

		
상권 내 앵커스토어-익선동	상권 내 관광명소(예시)	테라스 영업(예시)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 활성화

□ 단골가게 육성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생활상권 조성

- 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10분(반경 약 1km) 거리 이내 생활상권 조성
 - － 생활상권 육성사업 1·2기 총 13개소, 상권별 5억 내외 사업비 지원
 - － 주민 소비 만족감 제고를 위한 지역 소상공인 혁신 활동에 중점 지원
- 주도적 상인역량 강화 및 상권단위 자생력 확보 방안 마련
 - － 상점 운영 진단, 맞춤 교육, 공동마케팅, 홍보 등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상권 이용 촉진 전략 도출을 통해 수익모델 개발
- (소요예산) '22년 6,875백만원

- ❖ 추진목표 : 상권별 주민이용실태 분석·수요 반영으로 인당 단골가게 5개 확보
 - ▶ 주민생활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상점 방문율 증가
 - ex) 가정에 모아놓은 아이스팩, 일회용 수저 등을 동네상점에서 수거하여 재활용
 - ▶ 상인간 상생 협업을 통해 단골 고객 확대
 - ex) 요식업 중심의 상인 간 스터디그룹 결성, 상인 캐리커처 제작, 결제액의 10% 할인 쿠폰으로 서로의 상점 방문을 유도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테리어로 소상공인 가게 경쟁력 강화

□ 골목 가게와 지역 예술가를 연계하여 동네 가게 디자인 개선 지원

- 지역 예술가 창작재능 활용, 소상공인 가게 인테리어·디자인 개선 지원
 - － (지원내용) 상품·포장 및 간판 디자인 개선, 로고 제작 등 예술적 접목 가능 항목 지원(가게 재료비 150만원, 예술가 활동비 460만원 등)



- － (지원규모) 소상공인 가게 400개소 및 지역예술가 150명 선발
- － (지원방법) 자치구 공모를 통해 10개 자치구 선정

④

창업·성장·재기 선순환을 통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창업에서 폐업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자영업지원센터)

- (창업기) 예비창업가 역량 강화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전문성 있는 강사 Pool 운영을 통한 창업교육 7,000명 목표
 - 상권분석 및 매장연출, 메뉴개발, 사업장 위생 등 컨설팅 6,500건 제공
- (성장기) 인프라 개선 위한 **시설개선 비용 1,200개소 지원**
 - 친환경 LED조명간판, 인테리어 등 사업장 시설 및 환경개선 비용 1백만원 지원
- (재도전기) **성실실패자 대상 재도전 패키지 종합지원**으로 실질적 지원 추진
 - 창업교육,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 등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다양화
 - 재기지원 융자 신설(150억원) 및 이차보전 확대(0.4%→1.8%~2.3%)
 - 재도전 초기비용 등 최대 3백만원 직접 지원(보증료 1백만원, 씨앗자금 2백만원)

□ 골목창업학교 실무교육을 통해 준비된 청년사업가 양성

신규

- **실무 중심 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가 연간 40명 선발
 - 외식업, 카페·디저트류 업종 전문가 코칭 및 성공한 사업가와의 컨설팅 제공
 - 소수인원 대상 현장 조사부터 시제품 개발 및 홍보까지 종합패키지 지원

골목창업학교('21.7.5, 성동구, 규모 : 4~5층 706.56㎡)

- ◆ 교육공간 :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운영사무실
- ◆ 실습공간 : 조리, 베이커리, 커피·차, 공방 실습실, 스튜디오

○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혁신사업 발굴 및 1.2억원 창업자금 조달 지원

- 우수사업기획에 대한 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원(15명)
- 융자지원 한도확대(7천만원) 포함 최대 1.2억원 창업자금 조달 지원
- ※ 사업 수료 후 창업한 소상공인(창업 후 1년 이내)에 대해 한도 완화, 이자 일부 지원

예방 ~ 초기진압 ~ 복구까지 전통시장 화재관리 시스템 체계화

- ❖ 노후시설, 좁은 통로와 다수점포 밀집 등 열악한 환경으로 화재발생요인 상존
 - ❖ 전통시장 화재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기적 원인(45.5%) 차단노력 필요
 - ▶ '21.12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시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화재 확산 사전 차단
- ⇒ 전통시장 화재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 구축

□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구축을 통한 화재 예방활동 강화

강 화

- 연내 전통시장 내 화재감지기 100% 설치로 화재 초기 대응력 제고
 - (대상규모) 358개 전통시장, 58천여 점포
 - (소요예산) 290백만원 ※ 추경확보 필요
- 중대형시장 점포 LOT기반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25년까지 70% 목표)
 - (설치목표) 23개 중·대형시장 18,000개 점포
 - 4년간 매년 화재알림시설 4,448개소, 노후전선 정비 4,592개소
 - (소요예산) 37,468백만원 ('22년 9,367백만원, 추경 필요)

화재감지기 수신기
〈set당 약 80만원〉

 - ※ 화재알림시설 66개 전통시장 6,078개 점포 설치 완료 (10.5%, '21년)
 - ※ 노후전선정비 40개 전통시장 4,390개 점포 정비 완료(7.6%, '21년)
- 시설현대화사업비 중 화재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를 연차별로 30%까지 확대
 - '22년 15% → '23년 20% → '24년 25% → '25년 이후 30%
 - 스프링클러, 화재감지시설, LPG공동보관함, CCTV 등 현대화사업 추진
 - ※ '22년 기준 총사업비(11,826백만원)의 17.8%인 2,123백만원 반영
 - (소요예산) '22년 2,123백만원

☐ 화재발생시 신속한 사후 복구를 통한 영업활동 등 일상회복 지원

- 36.8%에 불과한 보험가입률(민간 포함)을 '25년까지 70% 이상 가입 유도
 - － (지원내용) 점포당 공제보험료 납입금액의 최대 60% 지원 (연 122,520원 한도)
 - － (소요예산) 70% 이상 달성 시 연간 2,397백만원 ('22년 예산 280백만원 반영 중)
- 폐기물처리비 및 스프링클러, 비상급수시설 등 복구지원 (570백만원)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

☐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ON - 전통시장」 생태계 구축

강 화

- 비대면 쇼핑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전통시장의 온라인 입점 지원
 - － 시장 및 상점가 15개소 대상 국내 주요 쇼핑몰 내 입점 지원('22년 750백만원)
- 쌍방향 소통 라이브 커머스 및 온라인 특판전 개최로 매출 극대화
 - － 젊은 소비층 타겟으로 다양한 판매채널 개설 및 매출 지원('22년 1,050백만원)

현 행	개 선
■ 자체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 － 지속적인 유지관리 부재로 활성화가 어려움	■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특판전 확대 － 젊은 소비층을 끌어 들이기 위해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정책 전환 ※ 11번가 라이브커머스('22.1.24.) 30만뷰 돌파



☐ 스마트한 전통시장 관리 시스템 및 통합 플랫폼 구축(디지털화)

- 온라인 플랫폼 내 동네 전통시장 소개, 명절 이벤트 등 각종 정책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전통시장 접근성 강화
- 전통시장 관련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 실시간으로 관리, 정책에 활용
 -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https://golmok.seoul.go.kr/>)과 연계·고도화(∼'22년)

☐ 공동 배송 인건비·배송센터 설치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 편의 개선

- 배송·장보기 인건비 및 배송센터 설치 지원으로 편리한 쇼핑 환경 구축
- 2022년도 18개 전통시장 공동 배송 인건비 지원 (500백만원)
 - ※ '21년 27개소 전통시장 공동 배송 인건비 534백만원 지원

3

디지털 전환시대 소상공인 대응력 및 경쟁력 강화

- ① 서울페이 + 구축으로 소상공인 매출 및 시민편의 확대
- ②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온라인 입점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회복

①

서울Pay+ 플랫폼 구축으로 소상공인 매출·시민편의 확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2022년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서울시 전용 결제앱으로 간편결제·생활행정 서비스 제공

[소비자] 현금외 카드로 상품권 구매,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이용 (이용자 '21년 139만명 → '22년 160만명)
[가맹점] 매출분석, 세무·재무·노무 서비스 이용, 시기별 가맹점 추천 ('21년 23만개 → '22년 53만개)
[서울시] 교통·관광·복지 등 주요 시정 홍보 및 맞춤형 지원, 정책자금 접수·지급·분석 등에 활용

□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기능 추가하여 시민 편의 제공 신규

- (상품권 구매) 현금 이외에 신용·체크카드(신한카드)로 구매가능(전국최초)
 - (기존) 계좌에서 현금으로 구매 → (변경) 현금 + 신용·체크카드로 구매
- (상품권 결제) 상품권 잔액부족시 카드 + 기타 선불 충전금 자동 합산결제
 - (기존) 상품권 보유잔액 소진시 현금 또는 실물카드로 별도 결제
 - (변경) 상품권 결제잔액 + 신한카드(앱카드)로 동시에 자동결제

□ 소상공인 가게 주문 접수, 결제에 모바일 신기술 도입 지원으로 디지털 시대 소상공인 대응력 제고 신규

- 안면인식결제·NFC결제·터치결제 등 도입으로 스마트 오더 실행
 - 테이블에 부착된 QR코드 스캔하여 비대면·비접촉 주문 및 결제 동시 처리
 - 시청·서울역 등 직장인 밀집지역 및 관광특구지역 음식점 중심 시범운영

□ 맞춤형 행정지원 및 정책홍보·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행정력 절감 및 시민 편의성 증진 신규

- 교통·복지·관광 등 생활정보 및 정책안내 등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활용
 - 시·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결제앱 내 탑재
 - 서울Pay+ 결제앱 배너 및 공지사항, 카카오톡 알림톡·앱푸시 등 활용
- 정책자금 플랫폼 연계로 공공기관 방문·서류 없는 올인원·논스톱 서비스 구현
- 정책 만족도 조사·투표·설문 등 정책개발·개선·제안 플랫폼으로 활용

소상공인 플랫폼담당관

[illegible]

4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 ① 체계적 예술인 권익보호 등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
- ②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으로 임차상인 영업기반 안정화
- ③ 신유형 소비자 피해 해결 및 민생침해 취약분야 집중점검
- ④ 공정거래종합지원 체계 강화로 소상공인 피해근절

①

체계적 예술인 권익보호 등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

공정경제담당관

□ 공모전 운영기준 마련 등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

신규

- **공정한 공모전 운영기준 마련**으로 신진 문화예술인의 기회 및 권리 보장('22.3월)
 - － 영상물·사진·정책 아이디어 등 다양한 유형의 공모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지침 제정
 - (공모전 권리관계) 권리귀속, 계약체결 등 / (공모전 표준절차) 심사기준, 표절 사전검증 절차 및 방법 등
- **문화예술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민간부문과 「공모전 공정환경 조성 협약」 체결**(22.6월)
 - － (협약대상) 대학, 네이버웹툰 등 다수의 공모전 주최기관 및 공모전 플랫폼사
 - － (협약내용) 공모전 표준지침 준수 협력, 창작자 권리 보호 공동 캠페인

□ 부당계약 등 분쟁조정을 위한 **문화예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신규

- 학계, 변호사, 예술단체 종사자 등 전문가로 조정위원 구성 ('22.5월~)
 - － 부당한 계약강요 및 대금체불 등 문화예술분야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조정
 - － 市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사례 중 조정사건 우선 선정·추진
- **시·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건의로 성과 공유 확산**(예술인권리보장법)

□ 예술인단체와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불공정 피해상담**(22.3월)

신규

- **예술인단체에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으로 예술인 접근성 제고
 - － 예술인 단체에 市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변호사 1:1 매칭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 한국연극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
 - － 1:1 전담매칭된 변호사가 월1회 단체 파견, 불공정 피해상담 지원
 -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150건) 중 약67%(100건)가 계약서 검토 및 자문 관련 건임
- **예술인단체에 현장상담 신고센터 지정·운영**하여 예술인 권익구제 활성화
 - － 영화, 연극, 방송 등 분야별 예술인 단체에 현장상담·신고센터 지정·운영
 - － 현장전문가 양성하여 현장 기초상담, 분쟁조정 신청접수 등 밀착 지원

②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으로 임차상인 영업기반 안정화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공적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강 화

- 법원연계형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추진('22. 상반기)
 - 지방법원과 협약을 통한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조정기관으로 지정
- '통상임대료' 조사 확대로 분쟁조정 신뢰도 및 객관성 확보
 - 통상임대료 조사수 : 7,500개('21년) → 12,500개('22년)
 - 주요상권 150개소 점포 임대료 등의 조사 표본수 확대로 신뢰성 있는 자료 도출
- 임대차 분쟁 조정 불응 시에도 적정 임대료 권고문 작성·제공
 - 건축사, 감정사 등 전문가 현장조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검토, 권고문 작성
⇒ 소송 전 분쟁 해결 유도 및 임차인이 소송 제기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 '서울형 공정임대료' 활용, 차임감액 가이드라인 제공 분쟁 사전 예방
 - 시장임료, 신규·계속임료 여부 등 종합적 검토 후 공정임대료 결정



- 임대차 상담 활성화 및 'One-Stop 상담체계' 구축 운영
 - (기존) 법령 위주 상담 → (개선) 소 제기 방법 및 임대차 소송 판례 등 심층 상담

□ 분쟁조정 기관간 협업 강화 및 상가임대차 제도 홍보 활성화 강 화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운영기관 협업체계 구축('22.3월)
 - 운영기관 : 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 지자체(서울,경기,인천,부산)
 - 분쟁조정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 기관 간 업무협조 등 간담회 개최(반기별)
- 분쟁조정제도, 차임감액청구권 등 제도운영 전반 홍보(연중)
 - 소상공인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시장연합회, 상인회 등을 통한 홍보 확대
 - 상가임대차 분쟁 사례집·가이드북, 리플릿 등 홍보자료 배포 등
- '상가임대차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제도 개선 추진('22 상반기)
 - 임대료 증액(5%) 결정권 시·도 위임, 상가임대료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도입 등

③

신유형 소비자 피해 해결 및 민생침해 취약분야 집중점검

공정경제담당관

□ 신유형 거래 불공정행위 감시 및 소비자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강 화

○ 코로나19 이후 신유형 소비자피해 사례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강화(연중)

- 신유형 소비(라이브커머스, 구독서비스 등) 불공정행위 및 사기사이트 감시 강화

- 특정품목, 특정유형 불공정행위로 피해급증 시 피해주의보 발령

- 영업중 전자상거래 업체 모니터링 정보 및 쇼핑물 등급 공개(4만여개, 25개 항목)

〈전자상거래센터 쇼핑물 평가〉

○ 소비자분쟁조정 자문단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개선(상반기)

신규

- 소비자피해구제 실무경험 기관(한국소비자원 등) 퇴직자 활용 : 6~7인 내외

- 주식리딩방 등 고질적 피해 품목 대상 전문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

□ 현명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역량 강화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육성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 대상 : 서울시 및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26개소)

- 소비자 피해예방, 취약계층 소비자문제 해소 등 특화사업

- (공모) 및 피해구제 사업(상담실 운영지원) 추진

- 청소년 등 대상 소비자 피해 유형 및 대응방법 등 교육 동영상 제작·제공



○ 소비자 권익증진 저해 불합리한 소비자 권익 제한 제도 개선(하반기)

- 소비자 관점 市·區 조례·규칙 평가 : 시→한국소비자원 요청(연 1회)

-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 공산품 안전성 및 불법공산품 점검 강화로 생활용품 안심 거래 확보

강 화

○ 공산품 안전성 검사 비용지원 확대(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 안전검사 시험기관 확대(1기관→2기관) 및 검사물량 확대('22년 350건)

- 3년간 추진실적 : 690건('21년 283건, '20년 214건, '19년 193건)

○ 불법공산품(원산지 미표시, 의무사항 미표시 등)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8~9월)

- 서울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 의류 등 다소비 품목 집중점검, 위반업체 수사의뢰

□ 금융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강 화

- (피해위험 선제대응)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
 - － 신·변종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한 사전경보 발령 등 홍보·교육 강화
 -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차단 및 이용정지(수시)
 - － 「대부업법」 등에 대한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11월)
- (지도·단속 강화) 고질적 민생침해범죄 테마점검 등 현장점검 지원
 - － 고금리 일수대출, 허위·과장광고 등 기획 테마위주 집중점검(자치구 지원)
 -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3월, 9월)을 통한 자체 감독역량 제고
 - － 대부업법 미비점 보완, 제도개선 등을 위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11월)
- (피해구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사후구제기능 강화
 - － 불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6월) 및 센터운영현황 공개(3월)
 - － 유관기관 협업(채무자·소송대리인,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

□ 특수판매업 일제정비 및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영업 근절

- 특수판매업 현황 일제 정비('22.6월) 및 불법행위 점검(수시)
 - － 영업 여부 및 변경 신고(소재지 등) 사항 전수 현행화 작업('22.6월)
 - － 미영업 업체 폐업 신고 유도 및 직권말소('22.7~9월)
 - － 방문판매 영업신고 후 불법 영업행위 의심업체 시·구 합동점검(연중)
-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체 불법영업 원천 차단(반기)
 - － (다 단 계) 후원수당(35%) 초과 여부·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전수 점검(연2회)
 - － (후원방문) 직하위 1단계 이상, 후원수당 지급하는 행위 전수 점검(연2회)

□ 금융사기 피해 등 민생침해 예방 교육 추진

- 전화·SMS 이용한 전기금융통신사기 등 피해 예방 대응 강화
 - －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및 예방 동영상 제작·배포(市 유튜브, 소비자단체 등 배포·활용)
 - －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 대상 교육 실시



□ 철저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관리로 안전한 창업정보 제공

- 정보공개서 등록·관리로 가맹희망자의 정보부족에 따른 사전피해 예방
 - 가맹본부 사업현황, 가맹희망자 부담비용 등 창업 필수정보 기재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 가맹사업 정보 접근성 향상 위한 가맹사업 소개, 통계현황 등 홍보(SNS 등) 활동 강화(분기)
- 정보공개서 열람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 가맹희망자에게 홍보



〈메인화면 ※ 공정위 관리시스템〉



〈정보공개서 검색창〉



〈정보공개서 표출 정보〉

※ '20년 가맹사업 등록현황 : 가맹본부 1,996개, 브랜드 2,654개, 가맹점 163,145개

- 가맹사업자 대상 법·제도 설명회 및 예비·청년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가맹본사) 임직원 대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22.상반기 2회)
 - 등록의무 불이행·허위기재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서한문·문자발송 사전 안내(총 4회)
 - ※ '21년 행정처분 현황 : 과태료 122건('21.2~10), 직권취소 86건('20.12~'21.5), 조사의뢰 47건
 - (창 업 자) 가맹사업을 성공적으로 창업한 전문경영인 성공노하우 전수('22.하반기)

□ 가맹·대리점거래 분야 분쟁 상담 및 교육 강화로 소상공인 피해예방

- 현장밀착형 상담으로 분쟁예방 및 구제 강화
 - 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운영
- 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위한 가맹·대리점 관계자 대상 준법교육 실시
 - 업종별, 신규 가맹본부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분기1회)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구 눈물그만상담센터) 기능 강화로 센터 이용 활성화

-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여 변호사 등 전문상담 인력풀 확대
 - 공정거래지원센터 28명 → 40명, 문화예술상담센터 20명 → 30명
- 가맹분야 국한된 온라인 상담을 대리점 약관 등 8개 분야로 확대
 - 일반불공정,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하도급, 약관, 노무, 세무

5

상생기업 경쟁력 강화와 가치소비 확산으로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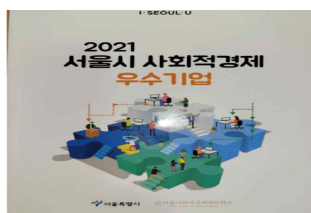
- ① 사회적 경제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② 혁신기업 가치성장 및 투자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기업경쟁력 제고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4대 사업보험료 지원(6,390백만원)
 - － 일반인력 고용시, 월 2,107천원의 40%(인증기업)~50%(예비기업) 지원
 - － 전문인력 고용시, 월급여의 80~90%지원(최대 200만원 또는 250만원)
 - － 4대 사회보험료 가입시, 사업주 부담분 월 193천원(1인) 지원으로 기업부담 완화
 - － '22년 인건비 지원으로 약 520명의 고용안정효과 기대(보험료 약 1천명 지원)
 - ※ '21년 지원현황 : 사업비 총 8,010백만원, 398개 기업 679명 고용창출
- 사회적기업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3,042백만원)
 -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품질 개선 등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 －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연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연 5천만원 지원
 - － '22년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약 200개 기업 지원목표
 - ※ '21년 지원현황 : 사업비 총 3,057백만원, 196개 기업 지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 육성·지원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견인

- 성장 가능성이 높고 사회가치 실현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95백만원)
 -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로고 및 브랜드 사용 자원, 기업별 홍보물 제작·배포
 - － '22년 7개 기업 신규 발굴, 기존 70개 기업 재인증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 선정·지원
-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450백만원)
 - － 경영지원, 판로지원, 품질향상지원, 홍보지원 등 기업별 사업분야 선택 지원
 - － '19년 이후 선정된 30개 우수기업에 최대 3년간 연15백만원 지원



소책자 제작



신규 기업별 리플렛



신규 기업 홍보 (유튜브)

□ **상생기업 콘텐츠플랫폼(케빈닷컴) 운영을 통한 가치소비 활성화**

❖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와 미래 소비를 주도할 MZ세대의 취향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콘텐츠플랫폼 구축('21.12월)

- MZ세대를 겨냥한 가치소비 콘텐츠 플랫폼 '**케빈닷컴**' 운영(약 420백만원)
 - － 비건·제로웨이스트 등 MZ세대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기업 및 제품소개 콘텐츠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작(월 10건 목표)
 - － '22년 운영목표 : 10만명 유입('21년 4만 2천여 명)
- 시민과 소통하는 마케팅 및 홍보로 지속 가능한 판로 확보
 - － 개인별 맞춤 콘텐츠 추천, 아카이빙 기능 제공으로 시민의 지속적 방문 유도
 - － '서라비(구독자 애칭)', 시민에디터 등의 역할을 제공하여 시민 주체적 참여 유도
 - －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홍보를 통해 플랫폼 방문자 확대

□ **온라인 'MZ세대 가치소비 특별판매전' 추진**

- 다양한 민간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마켓 개최('22.9~11월, 320백만원)
 - － 크라우드펀딩(와디즈, 텀블벅 등)·라이브커머스(네이버 등) 등 상품별 맞춤 플랫폼 매칭
 - － 민간 온라인쇼핑몰과 기획전(11번가·쿠팡·마켓컬리 등)을 통한 매출 견인
 - － '22년 온라인 마켓을 통해 200개 기업참여, 8억원 이상 매출목표
 - ※ '21년 추진실적 : 90개 기업참여, 방문자 32만명, 매출액 708백만원

□ **상생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민간시장 진출 지원**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쇼핑몰 '**함께누리몰**' 운영('22년 목표매출 : 38억)
 - － 공공시장 성격에 맞는 상품 확대 및 시즌별(추석, 연말 등) 맞춤 기획전으로 매출 증대
 - － 기업에 공공기관 입찰 동향, 공공시장 분석정보, 공공시장 진입 관련 컨설팅 등 제공
 - ※ '21년 추진실적 : 입점기업 609개, 매출액 37억원
-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업 등을 통해 우수기업의 민간판로 확대지원
 - － 민간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품평회 등 지원(50개 기업 목표)

②

혁신기업 및 가치투자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담당관

□ 소셜벤처 발굴·육성을 통해 혁신기업 창업·성장 견인 (1,093백만원)

※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벤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성장성 높음**

- 소셜벤처 실태 조사('20년) : 자금조달(39.3%), 판로개척(22.6%), 인력확보(14.4%) 등
- 서울소재 소셜벤처 기업 수 : 467개(전국 1,509개의 31%)

- [판로발굴] 백화점, 이커머스 등 유통채널 입점 지원(20개 기업)
- [투자확대] 맞춤형 컨설팅 및 투자유치 연계 엑셀러레이팅(27개 기업)
- [추가입주] 기존 12개 입주기업에서 '22년 **2개 기업 추가** 발굴·육성

※ '21년 입주기업 주요성과 : 신규고용 165명, 매출액 13,177백만원, 투자유치 13,234백만원



엑셀러레이팅



IR라운드(기업설명회)



데모데이 시상

□ 사회적 가치투자(임팩트 투자펀드)로 혁신기업 청년창업 마중물 역할

- 민간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595억원 규모 투자조합(3개) 운영 중**
 - 595억 중 미투자금액 177억 투자예정(1호:34억, 2호:18억, 3호:125억)
 - 市 출자금(30억원) 대비 5.6배의 서울소재 기업 투자 효과(출자조건 2배)
- '22년 **신규 4호 조합 100억원(서울시 10억) 이상 규모로 펀드조성 추진**

※ '21년 추진실적 : 총 418억원 투자완료(서울소재 16개 기업, 168억 투자)

□ 비대면 기술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제작 지원으로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 [개봉 클러스터] 온라인 교육, 미디어 등 비대면 산업 14개 기업 지원
 - 멀티미디어룸 시설 활용, 라이브 커머스 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가락 클러스터] 식품 구독 서비스 등 먹거리 산업 분야 11개 기업 지원
 - 스튜디오룸 시설 활용, 레시피 개발, 온라인 구독 서비스 확대 지원 등

IV.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① 처리결과 총괄

② 시정 · 처리 요구사항

③ 건의사항

④ 기타 (자료제출 등)

1 처리결과 총괄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4건

○ 조치내역

구분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4	62	22	-	-
	시정·처리요구사항	26	12	14	-	-
	건의사항	9	1	8	-	-
	기타(자료제출 등)	49	49	-	-	-

2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주말에 제일 바쁜 라이더들에게 주말에 플랫폼 라이더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건 잘못됨. 시정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업명 : 서울시 거주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 수행기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예산액 150백만원) ○ 교육기간 : '21.11.6(토)~12.5(일) 기간 중 토·일 ※ 주말에만 장소 개방이 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주말 교육진행 (이론 및 주행실습 병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 4곳 대관) ○ 추진결과 : 총 13회, 506명(목표인원 500명) ☐ 향후계획 ○ 향후 사업추진시 평일에도 교육을 참석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 공모시 적극 검토하겠음
2. 사회적 경제 관련 10년 전에는 착한기업, 착한 사업이라고 극찬하던 사업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전망 회복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지난 10년간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성과를 되돌아 보자는 취지임
3. 사회적 경제 관련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갖기를 당부함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비전과 정책방향을 갖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 중 -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19~'22년) ○ 향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의 성과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서울연구원, '21.7월~'22.3월) ☐ 향후계획 ○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 '22.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콜센터 민간위탁 관련 고용안정 대책마련, 노동환경 개선 및 관리감독 실시, 직고용 과정 추진할 것.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요구관련 조치사항 - PC교체 및 공기청정기 설치, 사무용품 지급 등 사무환경 개선 및 상담원 심리상담 제공 등 조치완료('21.11월) ※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현장 방문('21.10.27) 후속조치 ○ 시에서는 노사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추진절차 모니터링 ☐ 향후계획 ○ 기관 특성 및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독려 - 기관별 노사전협의회를 통해 노조, 콜센터 상담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자체방안 마련
5.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단체가입 관련 민간상해보험은 산재보험보다 보장성 떨어지므로, 산재보험 가입이 우선시 될수 있도록 사업운영의 방향성 제고를 요구함.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 업 명 : 서울형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 보장내용 :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등 〈상해보험으로 추진한 사유〉 ▶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저조(가입률 40%)하는 등 산재보험 정착까지 시간 소요 ※ 노동자의 개인소득 노출기피, 사업주 부담 등으로 산재 가입 저조 ▶ 산재보험 정착시까지 라이더에게 최소한의 지원으로 상해보험사업을 시행하여 배달라이더의 건강권 보호 ※ 서울시 배달기사 권익향상을 위한 희망사항 조사결과('21.7월) : <u>단체보험지원(29.2%)</u> > <u>산재보험료 지원(17.2%)</u> ○ 시행기간 : 2021.12.13. ~ 2022.12.12 ○ 소요예산 : 2,500백만원(상해보험료) ☐ 향후계획 ○ 산재보험 가입독려 및 안전배달 문화 확산(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연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오세훈 시장의 25분에 달하는 대국민 브리핑 관련,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 서울시장에 사회투자기금이 특정단체에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40억 원 혈세가 낭비됐다는 업무보고 등이 의심이 되고 있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회투자기금이 특정단체 운용시 동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반복용자 실행, 반복적인 상환유예 기업에 대한 추가대출 등 문제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 무분별한 민간위탁은 지양하고 공공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취지임
7.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임. 타 시도도 4~5%인상하였으나 서울시는 0.6%의 임금인상에 그침.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및 市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의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간 소득 불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숙고 끝에 결정 ○ '23년 생활임금 산정시 생활임금 도입 취지 및 타 시·도 동향 등을 고려하되 현재 적용대상 이상으로 대상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최저임금과 과도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관리예정 - 지방계약법상 제약으로 현재 적용대상 (시·투출기관 직고용노동자, 뉴딜일자리, 시비 100%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사업)이상으로 대상 확대는 어려운 상황 ☐ 향후계획 ○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및 '23년 생활임금 결정 : '22.8월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의 경우 민간보험, 산재보험 중 수혜자 중심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재검토 필요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 업 명 : 서울형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 추진목적 :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배달라이더에게 상해보험지원 ○ 시행기간 : 2021.12.13 ~ 2022.12.12 ○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비교검토 - 산재보험보다 보장이 적으나 상해보험은 모든 라이더에게 보장적용, 자동가입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가능 <table><tr><th>내 용</th><th>산재보험</th><th>상해보험</th></tr><tr><td>보장범위</td><td>넓음(요양,휴업,간병 등)</td><td>좁음(신체상해)</td></tr><tr><td>가입절차</td><td>필요(근로복지공단)</td><td>불요(자동가입)</td></tr><tr><td>자기부담금</td><td>(사업주50%: 노동자50%)</td><td>없음</td></tr></table> - 배달기사 권익향상을 위한 희망사항 조사결과('21.7월) 반영 : 단체보험지원(29.2%) > 산재보험료 지원(17.2%) ⇒ 산재보험 보완적 측면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배달라이더의 사회안전망 강화 ☐ 향후계획 ○ 상해보험 홍보 등 안전배달문화 캠페인 추진 : 연중	내 용	산재보험	상해보험	보장범위	넓음(요양,휴업,간병 등)	좁음(신체상해)	가입절차	필요(근로복지공단)	불요(자동가입)	자기부담금	(사업주50%: 노동자50%)	없음
내 용	산재보험	상해보험											
보장범위	넓음(요양,휴업,간병 등)	좁음(신체상해)											
가입절차	필요(근로복지공단)	불요(자동가입)											
자기부담금	(사업주50%: 노동자50%)	없음											
9.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746명(29.8%) 이고, 이 중에 판매량이 소진되어서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76%(567명)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국비 지원요청 공문 행안부 및 기재부에 발송('21.12.3.) - 타 자치단체와 동등하게 국비 4% 지원 요청 - 국비 지원을 2% 유지 시, 할인율 10% 의무 해제 요청 ※ '22년 서울시 발행요청액 : 1조 850억원 '22년 행안부 지원규모액 : 7,600억원 발행요청액 대비 지원규모 : 70% ☐ 향후계획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위하여 행안부 및 기재부에 지속적인 국비 지원요청 및 타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 ○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 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하여 예산담당관 예산 증액 요청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77.2% 감액으로 축소될 예정임.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의 63.7%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하의 서민층으로 서민층의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책 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보아, 예산 증액을 노력바람.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국비 지원요청 공문 행안부 및 기재부에 발송 ('21.12.3.) - 타 자치단체와 동등하게 국비 4% 지원 요청 - 국비 지원을 2% 유지 시, 할인을 10% 의무 해제 요청 ☐ 향후계획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위하여 행안부 및 기재부에 지속적인 국비 지원요청 및 타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 ○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 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하여 예산담당관 예산 증액 요청 등
11. 함께누리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함. 접근성과 노출성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함께누리몰 노후화 시스템 개선 완료('21.8.) - PC·모바일 모두 이용가능한 반응형 웹 개발, 소셜로그인 기능 도입 등 사용자 접근성강화 -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 결제기능 및 상품 간 비교기능 추가 등 구매 편의성 증대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쇼핑몰 '함께누리몰' 홍보 강화 - 콘텐츠 플랫폼(캐빈닷넷)과 연계한 기업·상품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확산 -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상단 노출 등 지속적인 사이트 홍보 등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특별 기획전 추진 : '22.2월~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독려 공문 발송 : '22.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애초에 함께누리몰은 쇼핑몰에 대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음. 바로 검색되는 부분,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매우 부족함. 편의성을 강화한 쇼핑몰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함.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쇼핑몰 ‘함께누리몰’ 기능 강화 - 함께누리몰 플랫폼 내 상품 검색기능 최적화 - 사용자 맞춤 상품추천기능 및 베스트상품 노출 기능 강화 ☐ 향후계획 ○ 함께누리몰 운영계획 수립 : ’22.2월~ ○ 등록 상품 상세페이지 오류 점검 등 지속 모니터링 : 상시 ○ 사용자대상 쇼핑몰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 ’22.12월																
13.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 산정 현황, 인상 근거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table><tr><th>구 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r><tr><td>市생활임금</td><td>10,523원</td><td>10,702(1.7% ↑)</td><td>10,766(0.6% ↑)</td></tr><tr><td>교육청 생활임금</td><td>10,850원</td><td>11,010(1.5% ↑)</td><td>11,240(2.1% ↑)</td></tr><tr><td>최저임금</td><td>8,590원</td><td>8,720원(1.5% ↑)</td><td>9,160원(5.1% ↑)</td></tr></table> ○ ’23년 생활임금 산정시 市 교육청 산정현황, 인상 근거 등을 참고하여 결정 예정 ☐ 향후계획 ○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및 ’23년 생활임금 결정 : ’22.8월 예정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市생활임금	10,523원	10,702(1.7% ↑)	10,766(0.6% ↑)	교육청 생활임금	10,850원	11,010(1.5% ↑)	11,240(2.1% ↑)	최저임금	8,590원	8,720원(1.5% ↑)	9,160원(5.1%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市생활임금	10,523원	10,702(1.7% ↑)	10,766(0.6% ↑)														
교육청 생활임금	10,850원	11,010(1.5% ↑)	11,240(2.1% ↑)														
최저임금	8,590원	8,720원(1.5% ↑)	9,160원(5.1%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함.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해 생활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및 市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의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간 소득 불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숙고 끝에 결정 ○ '23년 생활임금 산정시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고려하되 현재 적용대상 이상으로 대상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최저임금과 과도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임 - 생활임금 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향후계획 ○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및 '23년 생활임금 결정 : '22.8월 예정
15. 민간위탁사업 센터 방만 운영, 중복지원 방지의 문제로 예산 삭감을 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적시에 제출 및 보고 필요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2년은 민간위탁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 향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사업 운영상 보완점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안 편성 전 자료 제출 및 보고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등의 권한과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됨. 이에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곳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길 요청함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는 그간 지자체 최초 노동안전팀 신설('19.1.), 노동안전조서관 제도 도입('19.5.), 산업안전 조례제정('20.1.),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시행('20.12.) 등 관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음. ○ 민간 부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어사대 지도·점검('18~', 41,356건) 및 안전교육 실시, 마을노무사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100개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산업안전팀 시범 설치(2개소) 등 민간부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안전어사대 인력 증원(20→40명), 서울형 표준 산업안전수칙 개발·배포 등 민간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 활동 강화할 예정임. ○ 민간부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시행계획 수립시 소요 예산을 검토하여 반영 추진하겠음.
17. 산업안전지도관이 도입되면 민간 사업장에까지 지도 권한을 받게됨. 이에 따른 신속한 준비를 하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년 개정 추진)을 통해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임 - 지자체 공무원에게 위험사업장 출입·지도 권한 및 불량사업장 고용노동부 통보 의무를 부여하나 근로감독 권한은 공유하지 않음 ⇒ 권한의 부재로 민간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지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예상됨 ○ 서울시에서는 산업안전지도관 업무와 유사한 “서울시 안전어사대”를 운영, 건설공사장 상시 안전점검('18. 8.~)(지자체 최초)을 실시 중 -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연간 약 6,000개소) - 점검내용 : 추락 등 건설현장 위험요인 상시 점검 - 점검실적 : '18. 8월 구성 이후 8,285개 현장 41,356건 지적·시정 ☐ 향후계획 ○ 향후 안전어사대 인력을 증원(20→40명)하여 사업장 안전점검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겠음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고위험·불량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처분 권한 부여 요청 및 민간사업장 근로감독권 공유 지속 건의 ※ 고용부 건의 : '20.9.28. '21.10.28(산재예방 협의회), '21.11.9. (공문요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서울시 노동센터 예산 운영비, 사업비가 1억 3천으로 잡혀있는데 운영비로 직원들 급여를 내는데 이 정도 되는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서울시가 서울시 기관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예산을 주는 것인지, 상식선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2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삭감 사유는 ① '21년도 주요사업 재정사업 평가 결과(미흡)에 따른 10%이상 의무삭감, ② 시·구립 센터 중복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 추진 등임. ○ 다만 '22년 센터 예산이 시 당초 제출예산(2,892백만원) 대비 690백만원이 증가한 3,582백만원으로 확정되어 센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향후계획 ○ '22년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등 핵심기능에 집중하고, 홍보는 시가 추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19. 금번 추경시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4無안심금융자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출연금을 동의한 적이 없음.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이 갈 때 기본적으로 상임위에 동의안을 보고해야 되는데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추가 출연관련 상임위원장 및 일부 위원에 진행 경위 등 별도 보고('21.10.27~28) 〈 보고내용 〉 ▶ 당초 부서 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기경위('21.8.30.) 안전 미포함 ▶ '국민지원금' 예산 감액분에 대해 해당 상임위 논의('21.8.31.) ▶ '4무 안심금융'추가 공급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예결위 의결('21.9.1.) 및 본회의 안전처리('21.9.2.) ☐ 향후계획 ○ 향후 추가 출연등 진행시 상임위 의결 등 철저히 진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 해외에서 서울은 어떻게 사회적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 있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사회적경제를 두고 ATM이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함.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전망 회복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 반복적인 상환유예 기업에 대한 추가대출 등의 문제점을 정비하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22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수립 : '22.2월																
21. 서울의 사경 사업은 폐기가 되고 정부 매칭 사업만 진행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10년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므로 시정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2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 25,086백만원 중 국비 9,388백만원이며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2021년(A)</th><th>2022년(B)</th><th>증감(A-B)</th></tr><tr><td>계</td><td>(×12,102) 40,612</td><td>(×9,388) 25,141</td><td>(×△2,714) △15,471</td></tr><tr><td>사 업 비</td><td>(×12,102) 33,366</td><td>(×9,388) 25,086</td><td>(×△2,714) △8,280</td></tr><tr><td>의 무 경 비</td><td>7,246</td><td>55</td><td>△7,191</td></tr></table> ※ 의무경비=기본경비+사회투자기금 전출금+국고보조금 반환금 ☐ 주요사업 - 사회적경제 시민체감 및 인식제고 : 2,287백만원(전액시비) -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 22,799백만원(국비 9,338백만원)	구 분	2021년(A)	2022년(B)	증감(A-B)	계	(×12,102) 40,612	(×9,388) 25,141	(×△2,714) △15,471	사 업 비	(×12,102) 33,366	(×9,388) 25,086	(×△2,714) △8,280	의 무 경 비	7,246	55	△7,191
구 분	2021년(A)	2022년(B)	증감(A-B)														
계	(×12,102) 40,612	(×9,388) 25,141	(×△2,714) △15,471														
사 업 비	(×12,102) 33,366	(×9,388) 25,086	(×△2,714) △8,280														
의 무 경 비	7,246	55	△7,19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2. 서울시 바로세우기 예산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는 오세훈 시장이 시작하고 박원순 시장이 체계화 시킴. 1단계 생태계 조성 2단계 판로개척 3단계 일상으로 들어가는 사회적경제로 마을 속으로 녹아들게 함. 사회적경제는 25개 자치구가 함께 하는 사업임. 숙지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시-구 간 협력체계 구축 - 1단계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통한 생태계조성 · '12~'21년, 전 자치구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및 센터 설립 완료 - 2단계 : 공공·민간 판로활성화를 위한 민·관 지원체계 구축 · 시(함께누리물 등 운영), 시 센터(공공구매 교육, 컨설팅 및 유통채널 판로지원 등), 구 센터(지역축제 연계 장터, 관내 공공구매 홍보 등) - 3단계 : 25개 구 센터 및 지역 주민·기업 중심 사업 수행 · 市 : 주민주도 사업(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주민기술학교 등) 수행 · 區 : 주체육성(주민 및 기업(창업·성장 단계) 교육·컨설팅) 및 지역의제(돌봄(주거·식사지원 등), 환경(그린벤처)) 등 수행
23. 풍물시장 관련해서 가설건축물에 이전을 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500억 정도가 들어감. 오세훈 시장이 동대문 DDP를 이루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는 유일한 시장임.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름.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1,300억 들어갔다고 비판하면서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지 궁금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풍물시장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의 후속대책으로 기존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상인들을 현재의 서울풍물시장으로 입주시키면서 발생된 시책사업의 일환임 ○ 서울시는 서울풍물시장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매년 부지사용료를 납부해오고 있으며, '21년 사용료로는 729,093천원 납부한 바 있음 ☐ 향후계획 ○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풍물시장의 자생력 강화 유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 내년에 사회적경제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봤을 때, 풍물시장과 비교해 보면, 풍물시장은 예산 삭감도 이루어지지 않음. 풍물시장은 1년에 30억씩 갖고 감. 다른 시장은 1년에 1억 가져가기도 쉽지 않음.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 시장처럼 취임 하자마자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진 않음. 두 개의 사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업이 서울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공감을 받았었는지 느껴야 함. 예산 배정에 대한 검토 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2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사업폐지, 용역사업 축소,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실질적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일부 감액 편성하였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2년 예산은 4,673백만원으로 '21년 6,185백만원 대비 1,512백만원(24%) 감액편성 - 소셜벤처허브센터운영 '22년 예산은 1,093백만원으로 '21년 1,141백만원 대비 48백만원(5%) 감액편성 - 협동조합활성화지원 '22년 예산은 922백만원으로 '21년 1,115백만원 대비 193백만원(21%) 감액편성 ※ 서울풍물시장활성화 '22년 예산은 2,856백만원으로 '21년 3,237백만원대비 381백만원(12%) 감액편성
25.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말하면 본인이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잘못 제기도 필요함. 지금 서울시는 의회와 코로나19를 같이 해결해야 하고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와 지향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코로나19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지속 협력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 편성시 의회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 올해 연내 사업의 실현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경위 ○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25억원 추경반영 : '21.6월 ○ 사업자 공고(20억 이상 40일) : '21.8.24~10.5 ※ 공고기간 마감 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공고 실시 〈금감원 요청사항〉 피보험자 자격 수정 필요 (당초) 서울지역에서 배송업무중인 라이더 → (수정) 서울에 거주하는... ○ 수정공고(10.15~10.26) 결과, 단독응찰*하였으나 공정성 확보 및 경쟁을 통한 보장내역 상향을 위한 재공고 실시 (10.28 ~ 11.9) ※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독 응찰 ○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 '21.12.13~'22.12.12 ※ 최대한의 담보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기간 소요 : 11.15~29 □ 향후계획 ○ 상해보험 신청 홍보 및 안전교육 캠페인 추진 : 연중 수시 ○ 신청 및 지급현황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 : '22.1~12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1.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접근편의성, 실수요자, 운영시간, 홍보 등의 문제가 있음. 실질적인 간이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 바람. (노동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도봉쉼터는 일 평균 이용자가 3.5명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일 평균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21년 6월 개소 이후 지속 증가추세에 있음. ※ 서대문 간이쉼터는 부지 주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로 인해 현재 미운영 상태임. ☐ 향후계획 ○ 향후 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 도봉구에서는 구정뉴스, 팸플릿 배포 등 구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이용자 대상 불편사항 접수, 이용자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간이 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매년 예산확정시기와 공모일정이 달라, 예산 추경 편성으로 하고 있음. 시와 자치구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모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 바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구 예산 편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공모 일정 조정요청 검토 ☐ 향후계획 ○ '22년 상반기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특성화시장 업무협약 건의

건의사항	조치결과
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집행과정과 사후관리도 신경써주기를 바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진행중에는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사업 종료 후에도 축적된 노하우, 유무형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인회 역량강화에 힘쓰겠음 - 사후관리 우수사례 전파 ☐ 향후계획 ○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역량 강화 추진
4.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적 제한이 있으며, 상품권의 ‘관내이용제한’에 대한 불편하다는 의견이 55.9%임.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 전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자 불편해소 및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 광역 상품권 발행 - 발행규모 : 717억원 (할인율 7%) - 소요예산 : 56억원 (할인보전금 50억, 발행수수료 5.5억) ☐ 향후계획 ○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 '22. 1월 ~ 12월
5. 카드충전식과 종이(지류) 상품권 발행을 바란다는 의견이 78.2%임.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모바일 방식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실제 통계에서도 카드충전식과 종이 상품권 발행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인데 발행방식을 고민해 보기 바람.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류나 카드형태는 발행비용이 모바일에 비해 운영비가 0.6%~2.7% 많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 ○ 또한 지류, 카드형태는 부정 사용의 소지가 많아 모바일 전환을 유도하는 추세임 ☐ 향후계획 ○ 자치구 재량하에 모바일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년층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카드형 상품권 도입 검토 예정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6.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함께누리물 안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입점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함께누리물 브랜드 가치 제고 - 기업별 상품등록 및 홍보 전략 컨설팅 - 브랜드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제작·확산(캐빈닷넷) ☐ 향후계획 ○ 입점기업 발굴 및 상품등록 교육 실시 등 : '22.2월 ~
7. 함께누리물 회원 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며,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MZ세대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물이 되도록 노력바람.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MZ세대들을 위한 G2C 콘텐츠 플랫폼(캐빈닷넷) 본격 운영 - 비건·제로웨이스트·공정무역 등 가치소비 관련 콘텐츠 제작 - 시민에디터 공모·선정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플랫폼 운영 ○ 주요포털 광고를 통한 함께누리물 상단노출 및 인지도 제고 ☐ 향후계획 ○ 캐빈닷넷 운영업체 선정 : '22.2월 ○ 사회적이슈 및 트렌드 중심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22.3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8. 지속적인 경쟁성장 노동소득의 공정한 배분 사회통합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포용적인 혁신 성장과 시민연대에 의해서 다각화하고 잘 고쳐서 쓰자는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를 잘 살펴봐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2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민간위탁사업은 보조금 사업폐지, 용역사업 축소 및 직접추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부진사업 폐지, 기업 경쟁력 강화 집중지원 등 개선을 통해 실질적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 향후계획 ○ '22년 사회적경제 민간위탁사업 계획수립 : '22.2월
9.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보조금 부정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9년 목적 외 사용 지방보조금(52,685천원) 환수 완료 ○ 「서울상인연합회 지원 정상화 계획」 수립('21. 12. 17.) - 서울상인연합회 지방보조금 집행지침 마련 후 통보 ○ '21년 지방보조금 교부(협약 체결,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 향후계획 ○ 보조금 부당 집행 재발 방지(관리·감독 강화) -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관련법령 및 지방보조금 집행 지침 준수 철저,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등) - 보조금 정산 감독 철저(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활용 검토) ○ '22년 市 설 명절이벤트 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제고 - 행사기간: '22. 1. 17.~'22. 2. 2. - 지원대상: 우리 시 소재 전통시장 159개소(예정) - 사업예산: 715,600천원(市 271,500천원, 서울상인연합회 444,100천원)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치결과
1. 전통시장 최근3년 간 보조금 부정사용 내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2.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삭감된 내역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3.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최근3년 간 자치구별 현황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4.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보도자료 제출낸 목록 현황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5. DDP(풍물시장 관련) 육성계획 방침서, 활성화 계획 방침서, 위수탁 협약체결 협약서, 조성시부터 점포상인수 변동 현황, 최초 조성부터 유지관리비, 보수비용,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21~'22년 위탁비, 시정질문 이후 활동이나 달라진 방향들 (내년예산 포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6.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 지침,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방침서, 콜센터 상담원 정규직화 협의내역, 정규직화 대상 현황, 민간위탁기관 정규직화 진행 계획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7.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전문상담위원 명단 경력사항 사례집 배포현황 배포부수 포함 (공정경제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8.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국 민지원금 감액부분 활용 세출 관련부서 협의 내용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9. 2022년 올해 대비 20% 예산삭감 내역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10.제로페이 서포터즈 부정수령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1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시민문의사항 질의내용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12. 골목형 상점가 관련 25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 등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13. 서울 특성화 시장 관련 시장별 육성 사업 현황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14. 함께누리물 개편관련 전후 실적, 자치구 홍보현황 (사회적경제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치결과
15.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관련 산출내역 및 협상내역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1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근 2년간 정현원 변동현황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17. 노동자복지관 국제설계공모 심사 심사위원명단 절차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18. 간이노동자 설치사업 추가 공모계획 및 결과자료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19. 배달라이더 관련 유찰 및 재공고 내역 등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20. 사회적경제담당관 주요사업 예산 감액 사유 (사회적경제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2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현황 시설현대화 실태조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22.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침서, 협의서, 향후계획 등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23. 계약기간 만료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갱신거절의 위법 성(법률자문 검토 원본)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24. 전통시장 상인만족도 조사결과 요약본 제출 및 조사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변동 내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25. 플랫폼노동자 1차 추경 사업내용 변경 계약 및 지연 사유, 협상 보장 내용, 보장액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26. 노동인지예산 연구용역 완료 요약본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27.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 초안, 스케줄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28. 중대재해법 관련 정부기관 협의 내용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2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부기관 협의 내용 및 내년 준비사항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30. 안심디자인사업 개요 방침서 진행 사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치결과
31.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중 디지털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내용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32. 빅데이터기반 불공정거래분석 결과에 따른 실행계획 (공정경제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33. 직장내 괴롭힘 관련 자료(조례제정 이후 2020년 이후 신고된 내용, 조치내용, 사건처리 매뉴얼, 교육내용)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3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사업 진행사항 및 타 기관 협의 내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35.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자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36. 생활임금위원회 명단, 회의록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37.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사 현황 및 앱 가맹점 수, 앱 별 소비자 가입자 수, 월간 주문자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38.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수탁사업자 및 개관시기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39.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사업자 선정 서류, 계약서류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40. 생활임금제 자치구 통합안 내용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41. 노동인권센터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42. 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 법률상담 주요 사례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43.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실태조사 용역 준공자료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44. 직장내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준공자료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45.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만족도 조사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46. 노동복지관 확충 관련 추진현황 (상세 설계 내역) (노동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47.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공모절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4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지원 사업관련 입주기업 현황 및 공간운영 실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
49.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지원, 정부에 건의한 사항 정부협의 사항(20~2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료 제출 완료 ('21. 11. 4.)